

21세기 평화와 한반도 : 문제와 지향, 그리고 모색

박 명 규 (서울대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1. 서론

전세계의 우려를 자아내는 시리아 난민사태가 유럽통합의 기초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파리의 테러사태가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독일통일 25주년을 축하하고 난민의 수용을 위한 유럽국가들의 타협이 이루어진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오히려 민족간, 국가간 불신과 긴장이 고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인권, 연대, 관용의 정신을 문명적 자산으로 강조해온 유럽을 곤경 속에 빠뜨리고 있는 분쟁과 갈등의 현상을 보노라면 동북아는 오히려 갈등이 잘 관리되고 있는 곳이라던 유럽 지식인의 지적이 타당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반도의 잠재적 폭력, 전쟁위기를 해소하지 못한 동북아의 갈등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다소 일상화되어 무디어진 감이 없지 않지만, 실제로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심리적, 정치적 대립과 긴장은 미중의 세력다툼과 결합하여 동북아의 미래에 어두운 먹구름이 될 수 있다.

동북아의 새로운 전망을 위해서는 “평화”에 대한 성찰이 필수적이다.¹⁾ 오늘날 한국인들에게 경제발전, 민주주의, 인권신장, 세계화 등 다양한 미래가치들이 있지만 ‘평화’의 가치도 못지 않게 소중하다.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주목하면서 민족적 화해와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통일의 최우선성을 강조한다. 실제로 한반도의 통일은 헌법적 가치이면서 남북한 모두가 공감하는 목표이고 국가간 이익경쟁이 심한 국제사회에서조차 한반도 통일의 필연성을 명시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지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다양한 통일에 대한 감각, 생각, 지향들이 공존하며 ‘통일’이라는 같은 말을 쓰면서도 전혀 다른 동기와 전망을 갖는 탓에 더 큰 갈등과 긴장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현 시점에서 위에 언급한 여러 가치들과 함께 “평화”라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그것을 준거로 현실을 바라보며 다른 가치들을 재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통일의 전망은 평화의 가치와 연결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평화를 단지 ‘전쟁방지’ 나 국제질서 상의 분쟁관리 수준으로 파악하지 않고 삶의 기본양식, 인간성의 영역에까지 이르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전망은 필자의 책임 하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연구진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연구사업 ‘21세기 한반도발 평화학의 정립’ 과제의 목표이기도 하다. 필자는 이 연구단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작성한 연구계획서에서 다

1) 이 글의 내용은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기본적 관심주제, 즉 남북한의 다원적 통합, 사회변동과 통일전망, 연성복합통일론, 그리고 평화인문학의 정립 등을 전반적으로 포괄한다. 이 글은 필자가 다른 곳에서 이미 발표한 글을 종합, 전제한 것이다. 박명규, “21세기 새로운 평화학의 정립: 한반도적 맥락과 그 이론적 과제,” 서울대 HK평화연구 제1회 월례발표회 발제문 (2011. 6. 7.); 박명규, “한반도 녹색평화의 비전과 구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창립4주년 기념학술회의 (2010.4.26.); 박명규 외, [연성복합통일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2009); 박명규, “왜 지금 평화인문학인가” [평화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서장, 아카넷, 2013.

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본 연구단은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평화 연구의 흐름과 한반도의 특수한 조건을 연결해 '21세기 한반도발 평화론'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평화는 기본적으로 지구보편적 가치이고 이미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많은 연구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주제이지만 그 논의 속에 현재 한반도가 겪고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녹아있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논의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이를 한반도 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창조적 변형작업이 불가피합니다. 한반도에 필요한 평화는 남북 분단의 구조와 이와 연관된 한반도 주민들의 삶의 조건과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구체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한반도의 특수한 조건을 통해 강대국 중심이 아닌 중간규모 국가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새로운 평화론의 세계화를 추구할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 대결구조, 평화체제 논의 등을 이해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문화, 가치, 생활양식, 담론, 습관과 사유의 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과학을 넘어서 인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과학문들과 융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다시 한 문단을 인용하면,

한반도 현실에서 평화론은 불가피하게 통일, 안보, 군축, 비핵화 등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차원과 떨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현실과학적 성격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평화학의 발전에도 한계가 있을 뿐더러 실천적 차원에서도 단기적인 대응론에 한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평화학은 보다 장기적인 전망, 종합적 구상, 문명론적 실천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역사적 비전이며 이는 인간의 제조건을 고려하는 인문학적 상상력에 바탕을 두어야만 얻어지는 큰 그림입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 종교 간의 공존, 다른 정체성에 대한 관용, 생태적인 평화 형성, 성별 평화 등은 물론이고 기후변화나 광우병, 테러리즘과 정체성위기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문명적 대안형성도 연구의 내용에 포괄될 것입니다. 이런 종합적 평화연구를 통해 테러리즘의 위협과 생태환경의 위기, 기술합리성의 부작용 등이 커지고 있는 시대적 조건 속에서 한반도에 새로이 요청되는 21세기형 인문학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면서 21세기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학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문제의식, 과제 및 방법론, 자기성찰 등을 간략하게 검토해 보려 한다. 우선 주요한 준거틀로서 20세기 서구 평화학의 이론적 경향을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하기로 하겠다.

2. 20세기 평화학의 유산: 서구적 맥락과 보편적 지향

평화학(peace studies)은 아직도 명확하게 제도화되어 있는 학문분과는 아니다. 하지만 평화에 대한 논의들의 함의와 영향력은 작다고 할 수 없는데, 특히 담론과 규범의 차원에서 평화 의제는 강력한 힘을 행사한다. 유엔의 근본적인 지향이 평화이고 많은 국제기구, 단체,

운동이 평화를 중요한 화두로 삼고 있다. 평화학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전쟁의 참극을 겪었던 유럽의 경험, 그리고 2차대전 이후의 냉전상황을 주도한 서구의 학계 조건 속에서 발전했다. 유럽은 근대로의 전환을 주도하고 현재와 같은 과학기술문명의 세계적 확산을 주도해온 곳이면서 동시에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발발한 현장이어서 전쟁과 평화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미국 역시 유럽의 뒤를 이어 20세기 세계질서의 틀을 주도하고 전지구적 분쟁해결과 평화유지를 표방하는 중심국가로 자처했다. 뿐만 아니라 20세기 학문과 지식이 이들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근대학문과 마찬가지로 평화의 문제를 다루는 논의에서 이들 서구의 사례와 경험이 중요한 준거로 작용했음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아래에서 서구 평화학의 성격을 국제관계론 중심의 평화연구, 스칸디나비아의 비판적 평화학, 반핵과 문명평화론, 영미권의 분쟁해결연구로 나누어 간략하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²⁾.

(1) 국제관계학과 평화연구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는 무력과 전쟁을 관리하는 원칙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했다. 계몽과 과학이 전쟁을 방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갈등을 관리하는 방식과 모든 국가들을 규율할 국제적 원칙들을 발전시키려 했다. 국제연맹의 창설, 국제사법재판소의 설치, 분쟁조절을 위한 국제기구, 평화대회의 개최 등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특히 국제연맹은 영토분쟁과 국가간 전쟁을 억지하기 위한 세계정부구상이 구체화된 것이라 하겠는데 그 이상론에도 불구하고 2차대전을 막지 못한 채 해체되었다. 하지만 2차대전 이후 국제연합이 창설됨과 함께 국제적인 차원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평화주의 원칙이나 이상적인 평화운동으로는 부족하며 군비축소, 무기체제 관리, 국가간 분쟁해결, 국제적인 질서형성과 같은 실질적이고도 정책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발전했다. 이 맥락에서 평화연구가 진전했는데 갈통은 이를 ‘평화운동의 전문화’라고 불렀다.

유엔체제 하에서 전지구적 분쟁을 관리하기 위한 평화기획은 모든 전쟁을 불법화하고 ‘평화를 위한 유엔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국제질서를 재편했다. 냉전이 심화되면서 유엔의 원리는 상당부분 위축되었지만 동서 냉전의 미소 대립과 긴장을 어떻게 관리, 완화, 해소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연결되었다. 이 맥락에서는 평화연구라기보다 ‘분쟁해결’이라는 방식으로 접근되었는데 1950년대 미시간 대학의 갈등해결연구소와 여기서 출판된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이 그 전형이라 하겠다. 냉전 상황을 거치면서 국제관계학 중심의 연구들은 자연스럽게 안보전략, 전쟁억지, 무장평화의 주장들과 친화력을 갖게 되었다. 핵전쟁을 방지해야 하며 미소의 군사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큰 목표가 흔들린 것은 아니지만 이를 위해서 국방, 안보, 군사기술, 방어와 공격 같은 전략적인 논의들이 주를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안보연구와 평화연구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우주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어떤 외부공격도 방어하고 타격할 수 있는 군사력의 증강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믿음이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

물론 안보논의의 형태는 시기별로 달라져왔다. 국가중심의 안보론으로부터 유럽차원의 공동

2) 이하 논의는 이삼열, “세계 평화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방향,”; 요한 갈통, [형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이재봉 외 역, 들녘, 2000; 정주진, [갈등해결과 한국사회] 아르케, 2010; 하영선 외, [평화학 연구]; 이동기, “디히트리히 쟁하스의 평화연구” [통일과평화] 등에 크게 도움을 받았다.

안보체제, 집단안보논의가 발전했고 군사안보만이 아닌 경제안보, 사회안보, 인간안보 등의 개념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서유럽은 나토를 중심으로, 동유럽은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중심으로 지역단위의 전쟁방지체제를 구축하여 무력분쟁을 억지하였다. 탈냉전 후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해체되었지만 나토는 그 가맹국을 확대시키면서 여전히 유럽의 안전을 다자적으로 구현하는 레짐으로 유지되고 있다. 공동안보체제가 소극적 차원의 평화유지를 목표한 것이라면 유럽연합의 추진은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평화를 구현하려는 방안이었다. 비현실적으로 보였던 장 모네의 구상을 수십년간 점진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추진해온 유럽연합의 역사는 개별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공동의 생활단위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자원협력과 철강수급을 둘러싼 공동협약에서 시작하여 점차 사회문화적 협력체제로 발전하였던 유럽공동체는 급기야 화폐통합을 달성하고 이제 정치통합도 상당한 정도로 진척시키고 있다. 아직 유럽연합이 국가 간 갈등과 전쟁위협을 근원적으로 극복하였다고 보기는 이르고 유럽연합의 장기적 실패가능성을 점치는 견해도 없지 않지만 20세기적 모델을 넘어서려는 집합적 노력의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2012년 노벨평화상을 유럽연합에 수여했던 바에서 보듯 경제위기나 사회불안까지도 함께 감당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공동생활권을 만들어낸 유럽연합의 기획은 미래의 평화기획이란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유의미한 것이라 하겠다.

(2) 비판적 평화학

이러한 군사전략 중심의 평화연구를 강대국 중심의 현상유지론 내지 제국주의적 전략론이라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평화학을 강조한 움직임이 60년대부터 발전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낯익은 평화학은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의 연구를 배경으로 발전한 비판적 평화학이다. 평화학이란 이름과 독자적 연구의 주창자로 알려져 있는 갈통은 국가중심적 논의나 안보중심적 전쟁방지론을 넘어서 폭력일반을 문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평화학을 정립하고자 했다. 지금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의 개념, 그리고 사회안보나 인간안보와 같은 안보개념의 확장노력 등이 이러한 비판적 평화학에서 유래한다.

갈통을 중심으로 이런 평화학이 정립되는 데에는 스칸디나비아 지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갈통의 이론이 스칸디나비아 지역을 배경으로 발전했고 전인류의 평화를 표방한 노벨상은 스웨덴이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노벨평화상은 노르웨이에서 주도한다³⁾. 학술적으로 보더라도 1959년 노르웨이의 오슬로 평화연구소 (PRIO)가 사회연구원의 일부로 출범했다가 1966년 독립연구기관으로 되었는데 여기서 ‘적극적 평화’, ‘구조적 폭력’ 개념이 발전했고 1964년 이래 Journal of Peace Research 가 발간되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평화연구기관으로 존속하고 있다. 오슬로의 평화연구소는 지금까지도 평화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평화학 분야의 지적 토론과 상호작용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간으로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스웨덴에서도 150년동안 평화가 지속된 것을 기념하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가 1966년에 설립되었고 지금까지 군비와 군비축소, 평화에 대한 중요한 연구소로 활동하고 있다. 1969년 코펜하겐에서 모였던 국제평화연구협회 6차 유럽회의에서는 ‘코펜하겐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미국의 안보전략적 평화연구를 제국주의적 학문이라고 비판하고 미국의 이해에서 자유로운 평화학의 정립을 주창했다. 1971년 스웨덴 옉살라 대

3) 이 부분은 김명섭, 앞의 글 및 Elis Boulding, "평화운동의 조직형태-평화문화의 모태," 위의 책 수록, 참조.

학교에 평화와 갈등연구학과가 설립되고 1972년에는 스톡홀름에서 인간환경에 관한 유엔회의가 개최되고 여기서 환경과 평화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이 지역의 평화학 연구자들은 ‘공동안보’ 개념을 발전시켰고 1985년 설립된 코펜하겐 평화연구소는 ‘사회안보’ 개념을 적극 발전시켰다.

왜 평화학이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 이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가? 이 질문에 대해 이들 국가들이 지닌 평화의 전통, 노벨평화상이 갖는 상징성, 소국으로서의 혼성전략, 그리고 특수성을 보편화하는 능력 등을 들곤 한다. 하지만 이 지역 국가들이 왜 평화의 전통을 지니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려면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역사적 맥락을 좀더 이해해야 한다. 이곳도 오랜 외침과 정복, 이민족의 지배와 독립투쟁,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들로 인한 약소국가로서의 어려움을 오랫동안 겪은 곳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소국이지만 강대국 또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 어디에 배타적으로 속하지 않고 적절히 제3의 노선을 찾아가는 공간을 창출하려 했다. 북구라고 불리는 유럽의 또다른 지역적 특성을 고수하면서 평화를 중요한 자산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이 지역에서 평화학이 성장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서구적 근대성의 긍정적인 유산을 적극 수용하면서도 그 부정적인 한계를 넘어서려는 지적인 역량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집합적 지혜는 유럽의 근대사에서 겪은 국가주의,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폐해를 냉철하게 비판하면서 이를 넘어설 조건을 탐색하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지역의 연구자들이 개별국가나 지역적 차원에 함몰되지 않고 폭력과 평화를 유럽 전체 및 세계진반과 연결시켜 파악하고 대응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예컨대 유럽의 문명적 자산은 물론이고 비유럽적 전통, 특히 아시아의 문화에도 주목했는데 갈통은 물론이고 스톡홀름 평화연구소 창립에 앞장섰던 미르달 (Alva Myrdal)도 인도의 평화사상을 적극 수용하는데 앞장섰다. 한마디로 말해 이들 나라가 역사적으로 강대국으로부터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으면서 사회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지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객관화하고 상대화할 수 있는 상당한 역량을 지녔던 것이다. 대국을 지향하지도 않고 대국의 문제점을 평가하는 눈을 갖고 힘없는 소국으로 스스로를 위축시키려고 하지도 않는, 그들의 독특한 자부심과 전략적 위치선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⁴⁾.

갈통의 이론과 논의는 오랫동안 이 지역을 배경으로 발전한 평화학의 틀을 규정했다. 그에 의하면 평화학은 ‘평화’를 창출할 수 있는 (또는 해치는) 조건 및 과정에 대한 탐구로 파악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부재의 상태가 아니라 좀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폭력이나 갈등의 부재 내지 완화와 관련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본 갈통은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의 전쟁방지 및 안보중심적 평화론과 구별되는 평화학을 지향했다. 이를 위해 갈통은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를 구별한다. 소극적 평화는 국가간의 전쟁이 없는 상태, 따라서 정상적인 사회질서가 유지되는 상태를 지칭한다. 반면 적극적 평화는 전쟁만이 아니라 폭력일반까지를 문제시하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국가차원을 넘어서 삶과 문화 전반에서의 평화구현을 지향하는 것이다. 적극적 평화가 주목하는 폭력이나 갈등은 물리적인 수준에 한정되지 않고 경제적인 차별과 문화적인 억압까지 포괄하는 전면적인 것이다. 이처럼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구조적 차원과 문화적인 영역에서 작동하는 폭력까지를 주목했다는 점에서 갈통의 평화학은 일반적인 국제관계학과 구별된다. 그에 따르면 직접적 폭력은 행위자들 간에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폭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데 반해 구조적 폭력은 당사자들이 서로 인지하지 못하는, 또는 의도하지 않은 폭력의 작용을 의미한다. 또 문화적

4) 박명규, “소국주의와 대국주의를 넘어서,” [21세기 한반도 발전전략] 창비, 2005 참조.

폭력은 직접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는 모든 형태의 지적, 문화적 활동을 뜻한다.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의 개념화를 통해 당사자들 사이의 가시적인 폭력과 억압만이 아니라 제도와 관습, 법제와 질서 속에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을 드러내고 성찰할 수 있게 되었다.

(3) 반핵과 문명론적 평화연구

갈통의 평화학은 여러 가지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 지나치게 평화주의적 지향과 운동론적 성격을 강화시킴으로써 현실과학으로서의 지위확립에는 한계가 적지 않았다. 더구나 미국중심의 세계체제에 대한 환원론적 비판과 반전평화사상에의 과도한 경도, 낭만주의적인 문명비판 등의 문제도 적지 않았다. 70년대 말 유럽에서 확산된 반핵운동을 계기로 평화는 국가중심적인 안보론으로부터도 벗어나야하지만 동시에 낭만적인 평화운동이나 평화주의वाद도 구별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들이 확산되었다. 이 맥락에서 특히 강조된 것은 평화도 일종의 문명적인 기획이어야 한다는 것, 복합구성의 형태로 평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쟁하스를 들 수 있다.

쟁하스는 평화형성을 일종의 문명기획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그 문명기획이 반드시 근대 문명 전반을 부정하거나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는 최소한 다음 여섯가지의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 평화에 핵심적이라고 주장한다. 즉 폭력의 사유화금지 (국유화), 법치국가, 상호규제, 민주적 참여, 사회정의, 그리고 건설적 갈등문화 등이다. 쟁하스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제도화 및 성숙이라는 과제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파시즘의 발상지이자 그 폐해를 직접 겪었던 독일의 상황을 배경으로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문명기획과 평화형성의 연관성을 탐구한 것인데 민주주의 원리의 확립, 나찌즘에 대한 부정, 전쟁피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자기중심성의 극복, 전유럽(인류)적 과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계속 확인해야 했고 이런 노력은 평화구축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홀로코스트에 대한 자기반성과 민주주의의 심화를 통해 평화를 유럽차원 및 세계수준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강한 지향은 68세대의 출현 이후 강력한 대세를 이루었다. 갈통과는 달리 쟁하스는 평화를 '복합구성'의 문제로 파악하면서 평화를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요인들을 구체화시키려 했다는 점, 특히 그 가운데서 민주주의의 문제를 매우 중요시했다.

쟁하스는 갈통이 구조적 폭력으로 개념화하려 했던 바를 '조직화된 평화부재' 또는 '비평화 복합구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즉 평화부재나 비평화는 단지 구조적 폭력이나 억압의 결과라기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리 등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으로 산출되는 어떤 결과이며 그 자체가 복합적인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평화라는 것도 특정한 억압의 배제나 거부가 아니라 평화의 삶을 가능케 하는 구체적이고 경험과학적인 문명론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 점에서 그의 평화론은 '문명론적'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가 강조한 평화 6모퉁 이론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쟁하스는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여섯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이런 흐름과 맥을 함께 하는 평화론은 오늘날 중요한 이론의 하나인 민주평화론과 친화력이 높다. 모든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구현할 경우 국가들 사이에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이다. 민주적인 국가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주목할만한 분쟁사례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경험적 연구와 그럴 이유를 탐색하려는 이론적 논의들이 속출했다. 칸트의 영구평화론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논리적인 틀인데 유럽사회가 중시하는 관용, 다문화, 다양화, 포용 등이 평화의 관점에서 중시되는 것

이다. 현재 독일의 가장 큰 평화연구소라 할 프랑크푸르트의 헤센평화연구소는 ‘민주평화론’을 자신들의 연구기획의 근본적 틀로 내세우고 있다. 유럽연합이 가맹국들에게 요구하는 원칙에서도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와 함께 필수적인 핵심요건으로 간주 된다. 현재의 유럽평화에 큰 기여를 했던 헬싱키 프로세스도 동유럽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총체적인 구상이었다.

(4) 분쟁해결과 평화교육

영미권을 중심으로 국가단위가 아닌 집단간, 문화간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려는 미시적인 연구들이 발전했고 여러 갈등의 현장과 폭력사건의 치유, 분쟁이후의 이행기에 대한 연구 등이 그 내용을 이룬다. 갈등은 평화학이 단지 ‘폭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감소한 상태’를 의미하는 정태적 현상분석에 그쳐서는 안되고 오히려 ‘갈등을 비폭력적이고 창조적인 형태로 변형시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인 실천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차원이 미시적인 차원에서 강조된 연구들이라 하겠다.

3. 한반도 상황과 평화 담론

평화연구, 평화학의 세계적 분포 내지 확산에서 한국은 오랫동안 제외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갈통의 책에서도 지적되었듯⁵⁾, 아시아의 평화학은 일본과 인도가 주도했고 최근에는 호주가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한국평화학회’가 설립, 활동했으나 실천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학계 내부에서조차 그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또 유네스코 등이 주도하는 평화운동, 평화교육 등이 분산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체계적인 지식체계로, 주도적 담론으로 위치지워진 것은 아니다.

물론 평화의 문제 자체가 한국사회와 무관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평화는 매우 절실한 과제이자 현실적 쟁점으로 존재했다. 1907-10년의 시기, 1918-1920년대, 1950년대 초반, 1990년대, 그리고 현재를 구분해보면 각 시점 별로 부각된 평화의 성격과 환경은 꽤 달라져왔다. 1907-1910년에는 헤이그에서 개최된 만국평화회의에 참여하려던 이준 열사 등의 행적과 진정한 ‘동양평화’를 모색하는 안중근의 생각 속에서, 1918-20년대에는 1차세계대전 종전과 파리평화회의의 이상주의적 관점과 3.1운동의 여파로 ‘평화’에 대한 본격적 관심과 논의가 등장한 바 있다. 한국전쟁기에는 종전과 평화협정을 둘러싸고, 또 냉전체제의 형성 속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윤색된 평화논의들이 동아시아에서 확대되었다. 1990년대 탈냉전의 진전, 한국의 북방정책, 남북한의 화해와 교류의 진전과 함께 평화체제 논의가 2000년대에 부각된 바 있다.⁶⁾ 최근에는 북한의 핵개발,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자원고갈에 따른 내부위협도의 증대, 지나친 경쟁사회로 인한 실존적 피폐함과 평화부재, 다문화화와 다인종화에 노출된 새로운 경험 등이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 시점에서 한반도에서의 평화문제는 한반도적 특수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21세기 전 인류

5) 갈통, 앞의 책 및 기미야 다다시, “일본의 평화학과 한국에의 함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국제심포지움 발제문, 2011. 4; 김명섭, “평화학의 현황과 전망,” 하영선 편, [21세기 평화학] 풀빛, 2002.

6) 하영선 (한국평화학회) 편, [21세기 평화학], 풀빛, 2002.

가 함께 고민해야 할 쟁점들을 축약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갈통이 스칸디나비아의 경험을 보편적 맥락에서 탐색함으로써 평화학을 정립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한반도의 역사적 조건과 과제를 폭넓은 세계사적 시야와 문명론적 관심으로 다룰 수 있다면 새로운 형태의 평화학을 구성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적 맥락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전인류적 차원에서의 이론적, 실천적 보편성을 담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을 특히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는, 남북간 적대적 대립, 무력대치에서 오는 물리적 폭력, 전쟁 가능성에 대한 억지의 과제가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문제는 일차적으로 매우 고전적인 전쟁방지의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인데 실제로 현재의 한반도는 극심한 무력대치상황에 정치적 불신과 사회경제적 단절 구조가 맞물려 물리적 충돌과 폭력의 증폭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전적 의미에서의 평화문제, 즉 전쟁의 방지, 안보중심의 평화론, 현실주의적 관점이 강한 힘을 발휘할 조건이 존재한다.

둘째로, 한반도의 이 갈등구조는 기본적으로 분단과 정전체제에서 유래하는 구조적 속성을 갖는다. 현재의 분단은 단순히 남북한 당사자의 적대성에 한정되지 않고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한 통일의 과제와 연결되는 것이고 다시 한미동맹의 미래 및 북미,북일수교와 같은 복합적인 국제정치와 결합된다. 한반도 차원을 중심으로 남북한, 북미, 북일, 미중의 다층적 갈등구조가 겹쳐있는 상황인 셈이다.

셋째로, 북한의 핵무장 전략으로 상징되는 핵무기의 위기가 있다. 핵의 군사적 이용은 전인류가 단호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유럽의 평화론이 일차적으로 중시하는 과제이지만 현재 한반도는 비핵화의 쟁점을 둘러싸고 매우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은 스스로의 체제위기를 극복할 방책으로 이 카드를 집요하게 붙들고 있지만 이 문제는 21세기 전지구적인 갈등확산, 테러와 비정규전의 가능성, 실패국가의 도전 등 새로운 세계평화문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넷째로, 핵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핵의 평화적 사용’이 어디까지, 어느 정도 논의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한국에는 21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중이고 핵폐기물 처리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북한은 ‘핵의 평화적 이용권’을 앞세워 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듯, 향후 원자력 에너지는 인류문명의 평화로운 지속을 위해서 중요한 성찰의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로, 한반도에는 여전히 냉전적 적개심이 레토릭 차원을 넘어 정책과 집단정서의 차원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전쟁의 결과 다양한 형태의 원한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을 풀어낼 기회를 갖지 못한 채 60년을 보내고 있다. 남북한 사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원한과 적개심이 존재하고 있다. 전쟁의 종식이라는 조약이나 규정의 문제 이전에 전쟁의 상처를 해소할 과정, 즉 진상규명과 용서, 그리고 화해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남북한 사이에 전쟁의 성격과 책임을 둘러싸고 여전히 정반대의 관점이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의 남북에는 적대적이고 갈등조장적인 문화와 논리들이 포용적이거나 관용적인 논리보다도 더 힘을 얻는 경향이 있다. 문화적 동질성을 선호하고 혼성적인 요소들을 거부하는 순수주의 내지 배타주의도 한 몫을 하고 있고 남북한이 서로에 대한 비난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문화정치도 여전히 존재한다.

여섯째, 고도성장과 발전주의를 뒷받침했던 집단문화가 향후 평화구축과 어떤 관련성을 맺

게 되는지도 뻔 수 없는 과제다. 갈통은 한국을 황색전략의 사례로 꼽았는데 시장논리와 국가논리가 함께 결합된 경우로 권위주의적이면서도 시장주의적인 원리가 힘을 행사하는 사회다. 이 바탕에는 20세기 이래 내면화했던 사회진화론적 의식, 약육강식의 경쟁론, 어떤 형태로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실존주의적 조급성 등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 구성원이 집합적으로 추구해오면서 자연스레 내면화한 근대적 가치들 자체가 매우 강력한 경쟁논리,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하며 모든 잘못을 개인책임으로 돌리면서도 국가의 강력한 동원력과 통제력을 희망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불균등한 발전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낙후된 지역과 계층의 소외와 어려움이 사회적 불안과 모순의 한 축이 되고 있다.

일곱째, 한국사회는 급속하고도 압축적인 성장전략의 결과 문명적 위기, 재해와 위험, 환경재난의 위기를 안고 있다. 기후변화, 생태적 위기, 환경오염 등 근대문명의 문제를 매우 전형적으로 겪고 있는 사회이고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는 폐기물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생태위기는 북한의 경우 더욱 심해서 산림, 토지를 비롯한 모든 환경이 자생력과 복원력을 위협받을 정도로 파괴되어 있다. 더구나 한반도 허리를 관통하는 비무장지대의 무수한 무기, 지뢰, 그리고 불모의 모래땅으로 유지되고 있는 양측 경계지역 등은 생태적인 문제의 일단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여덟째, 한국사회는 서구적 합리성과 전통적 문화가 잘 융합하기보다 불안정하게 혼재함으로써 종종 아노미와 문화적 모순을 드러내는 곳이다. 서구적 근대성이 제도적으로는 물론이고 개개인의 심성에도 상당히 내면화되었으면서도 그것의 구체적 작동방식은 전통적인 문화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한국사회 특유의 아비투스¹⁾가 작동한다. 그 과정에서 폭력과 갈등, 억압 등의 요소들이 당연시되고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곤 한다.

아홉째, 한국사회는 빠른 정보화와 도시화, 개방화로 인해 세계 어디보다도 동적이고 다이내믹한 곳이다. 한국의 속도감은 단지 빠르다는 특징에 머물지 않고 21세기에 살아남고 발전하는 문화적 역량으로까지 이해된다. 당연히 이런 속도경쟁은 지나친 경쟁, 낙오자의 양산, 피로, 여유의 부재, 갈등의 증폭, 환경파괴 등을 가져오기 쉽고 최종적으로 평화로운 사회를 창출하는데 부정적이다.

총체적으로 볼 때 한반도와 한국사회는 다양한 차원에서 평화가 위협되는 상황, 따라서 평화의 증진을 위한 학문적, 실천적 노력이 매우 절실한 사회라 할 수 있다.

4. 한반도발 새로운 평화학의 정립: 5 영역과 3 차원

앞서 살펴본 바대로 평화학이 발전함에 있어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되었던 것은 연구소였다. 스칸디나비아는 오슬로와 스톡홀름, 코펜하겐을 중심으로 한 연구소들이 큰 역할을 수행했다. 예컨대 오슬로 평화연구소(PRIO)를 기반으로 갈통의 연구와 이론화가 꽃을 피웠고 여기서 간행하는 Journal of Peace Studies는 국제적으로 평화연구의 담론적 장을 제공했다. 갈통의 개념으로 널리 알려진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등의 개념을 담은 책자도 이 연구소 명의로 간행된 것이었다. 스웨덴의 SIPRI는 전세계의 군사관련자료, 군비축소와 전쟁관련 연구에 중심을 이루었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에서도 갈등해소연구소가 평화연구의 중심이 되었고 일본의 경우에도 히로시미 평화연구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역할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수행하고자 한다. 대략 다음과 같은 5 영역에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1) 다섯 영역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적 맥락을 바탕으로 새로운 평화론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는 것이 이 연구단의 문제의식이다. 왜 그런 문제의식이 필요하며 과연 이론적으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앞서 언급한 한반도의 평화관련 문제들은 한반도 특유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21세기 세계적 현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보편적 측면도 적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적 맥락을 특수화시키기보다는 이 속에 드러난 21세기 전지구적 문제를 부각 시킴으로써 평화학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일차적으로는 ‘비평화’를 재생산하는 여러 차원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려 한다. 연구단에서는 이것을 “한반도 비평화의 복합구성 (Configuration)”이라고 지칭하고 비평화를 재생산하고 당연시하게 만드는 조건의 총체를 제도적 차원, 문화와 아비투스적 차원, 심성과 내면의식의 차원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다섯 영역을 중심으로 비평화 내지 평화부재의 복합구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분단질서의 구조적 폭력성과 전쟁위험, 무장적 갈등관리

둘째, 대북 적대성, 적개심, 냉전적 상호배타성

셋째, 집단주의의 동학 - 민족주의, 불관용, 가부장적 억압

넷째, 위험사회 - 발전주의, 생태적 파괴, 과잉경쟁

다섯째, 자기책임론, 개인의 좌절, 아노미, 인격의 와해로 인한 실존적 불안, 자살

비평화의 복합구성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갈등의 갈등의 삼각형 분석 방법을 원용, 재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즉 갈등을 재생산하는 구조는 그가 갈등의 삼 요소라고 불렀던 <행위 - 태도/가정 - 모순/내용>의 틀로 분석가능한데 이 세 요소의 결합구조로서 복합구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갈등, 폭력, 적대성은 물론이고 주관적으로 인지되지 않는 모순의 구조, 태도/가정 속에 내재한 긴장과 갈등의 조건들도 고려해야 하며 나아가 그런 갈등을 배태하는 심성, 문화, 아비투스에 대한 정치한 분석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2 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비평화의 복합구성을 해체하고 평화의 복합구성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 및 과제들에 대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첫째, 무장적 갈등관리에서 항구적인 한반도내 평화구축 (적대적 분단질서의 해체)

둘째, 남북간 적개심, 불신, 증오의 문화, 심성의 해체 (상호신뢰와 공동체의식)

셋째, 다원주의, 소수자들의 평안함, 관용의 문화

넷째, 사회적 보호, 배려, 연대의 문화 및 제도, 낙오자에 대한 복지..

다섯째, 실존적 자아감, 내면의 평안 및 자긍심, 안정감...

(2) 3 차원

갈통은 평화학을 질병의 치료와 건강유지를 위한 의학에 비유하면서 진단-예측-처방의 구

도를 지닌 지식체계로 간주했다. 즉 진단은 폭력(갈등)의 상태확인, 예측은 폭력(갈등)의 과정과 증가 또는 감소가능성에 대한 검토, 처방은 폭력(갈등)의 감소나 창조적 변형을 위한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평화학의 궁극적 목표는 처방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처방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상대방이나 자신을 파괴할 수도 있는 폭력이나 갈등을 억제하고 막는 소극적인 평화유지 (peace keeping), 폭력과 갈등을 유발하는 태도나 인식틀을 수정하고 변화시키는 적극적 평화조성 (peace making), 그리고 구조적으로 폭력이나 갈등을 부추기는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는 평화구축 (peace building)이 그것이다. 당연히 평화학은 데이터의 경험적 확인이나 이론구성에 머무르지 않고 폭력의 감소와 창조적 변형이라는 가치지향성을 지닌 학문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세 차원, 즉 평화유지 (peace keeping)와 평화조성 (peace making), 그리고 평화구축 (peace building)의 수준을 유념하여 위의 5 영역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요약하여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정치군사적 대립구도	적 개 심 과 증오심리	집 단 주 의 와 가부장제	발전주의와 기술도구성	아노미와 실 존적 불안
평화유지	갈등관리	증오의통제	다원주의	환경보호	치유,배려
평화조성	평화체제	신뢰형성	소통적이해	녹색성장	공생공존
평화구축	통일한국	공동체	숙의민주주의	녹색평화	영성의회복

(2) 통일평화, 녹색평화, 연대평화: 평화, 통일, 녹색, 연대의 이론적 결합

이런 분석이 이루어지면 종합적으로 이론화, 체계화함으로써 평화학의 논리를 새롭게 구성하는 일이 가능하리라 생각 한다. 특히 21세기 전지구적인 현실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의 문제가 갖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예민하게 검토함으로써 한반도발 평화학이 갖는 세계사적 적합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특히 21세기의 평화는 군사적 충돌의 억지 내지 관리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 내부의 갈등과 좌절, 울분의 문제까지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서 근대문명이 근거로 하는 개발주의와 성장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포괄하는 생태학적이고 인문학적 시각을 강조할 생각이다. 평화체제의 구축문제나 민족화해의 성취에 그치지 않고, 다원적 가치를 용납하고 사회적 관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 민주적 질서의 구축,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성장지상주의나 기술우선주의를 극복할 생태적 발전론의 모색, 나아가 지나친 경쟁사회 속에서 심리적 좌절과 소외에 빠지지 않게 할 내면적 평화, 실존적 평화의 바탕을 만들어내는 일에도 주목할 생각이다.

잠정적으로는 통일평화와 녹색평화, 그리고 연대평화라는 개념을 잠정적인 화두로 삼고 이론적인 탐색을 진행하고자 한다. 평화와 통일, 통일과 평화는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뗄 수 없는 두 화두다. 그런데 이 두 개념은 1990년대 이후 정치적 함의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남북한 및 정치세력들 사이에서도 상이한 지향을 반영한다. 또 양자를 연결시킬 경우 대부분은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떠올리지만 그 함의는 동일하지 않다. 한반도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두 개념을 연결시킬 때 두 가치의 독자적인 지향과 양자의 결합방식에 대한 깊은 탐색이 필요하다. 평화라는 것이 단순히 통일의 수단적 가치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목적가치로 설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한반도의 경우에 통일 없이는 궁극적으로 평화형성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상태를 분단평화라는 점에서 파악

하고 이 분단평화를 통일평화로 변화시킨다는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현재의 한반도는 분단과 무력대치를 통해 소극적 평화가 유지되는 질서를 반세기 이상 이어오고 있다. 첨예한 적대적 대치국면의 일상화가 지난 반세기동안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지 못하게 만든 주요한 조건이 되었다는 점은 아이러니이지만 무력의 균형만이 평화를 지킨다는 현실주의적인 시각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현실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런 분단평화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21세기의 접어들면서 남북한의 현재와 같은 적대적 공존, 분단체제가 그대로 존속되기란 어려운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탈냉전과 세계화가 초래하는 국제적 환경변화도 있고 남북한 사이에 현저하게 생겨난 비대칭성과 간극 또한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⁷⁾. 북한을 냉전체제 하에서와 같이 고정적 상수로 간주하기 어려워지고 남북간의 적대적 균형, 냉전적 평화상태를 국제적으로 보장했던 정전체제 역시 변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미간, 북일간 국교 정상화나 평화체제로의 이행은 그 자체가 현재의 한반도 질서에 매우 중대한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인 바, 소극적인 측면에서 북한변수를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만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이 한국사회의 향후 발전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사고가 필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소극적인 차원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차원과는 달리 통일을 추구하는 가운데 평화를 모색하는 적극적인 구상도 필요할 것이다. 통일한반도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남북 간의 적대성을 완화하고 화해를 도모하기 위한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실현하는 첩경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남북관계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며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한반도의 분단질서를 그럭저럭 관리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한반도에 통일국가 수립하는 일을 지지함으로써 분단에서 초래되는 불신과 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동북아에 진정한 평화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편 녹색평화라는 말 속에는 녹색가치와 평화지향을 결합시키려는 구상이 담겨있다. 물론 이것은 양자의 단순한 병렬은 아니며 녹색론과 평화론의 흐름을 창조적으로 변형시키는 전 과정을 포함하는 바, 녹색발전을 통한 평화형성, 평화구축을 통한 녹색발전이라는 말로 설명 가능하다. 추상적이거나 부분적인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녹색지향과 평화론을 사회전반의 제도와 실천영역으로 연결시키는 정책적, 종합적 기획을 발전시키는 일은 21세기 발전에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실제로 녹색가치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론을 모색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비록 더딘 진전과 한계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녹색론은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하는 주요한 인류적 의제가 되었다. 아직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자원수입국과 수출국 사이의 이해관계를 넘어설 보편의 틀을 발전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기술, 기후와 자원문제에 대한 대안적인 패러다임의 모색은 더 이상 선택항목이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평화 문제 역시 민족주의, 종족감정, 인종차별, 종교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문명론적 과제에 맞닥뜨리면서 근대문명 자체가 낳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물음 앞에 마주서 있다.

그런 점에서 녹색적 요소들을 단순히 성장을 돕거나 가능케 하려는 도구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가치의 실현 그 자체가 발전개념의 핵심이 되도록 발전에 대한 생각과 패러다임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생명,생태,자연 등을 강조하는 생태주의의 관점이 경제성장, 민주화는 물론이고 전쟁방지와 범죄예방, 일상생활의 행복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

7) 박명규, “남북관계와 비대칭적 분단국체제론,” [통일과 평화] 1권 1호, 2009.

는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미래전망을 담은 총체적 기획으로 자리매김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녹색가치와 평화가치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지니는데 녹색의 문제는 삶의 평화라는 가치와 직결되고 다시 평화는 녹색적 지향성을 모색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핵무기의 위협과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간의 어려운 쟁점은 물론이고 국가주의적인 발전전략을 넘어서 지역적 협력과 전인류적 차원의 공생을 모색할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환경문제에서 드러나듯 녹색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적 경계나 문화적 범주를 넘어서 지역적이고 지구적인 차원에서 추구되는 가치이기 때문인데 평화의 제도화 역시 국가적 경계를 넘어서지 않을 수 없다. 19세기 말에 시작되었던 만국평화회의의 시도, 1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연맹, 2차 대전 이후의 국제연합 등은 모두가 평화의 실현을 목표로 한 국제적 노력들이다. Anastasiou는 국가주의적 상호경쟁을 극복하는 것을 21세기 평화실현의 주요한 과제로 간주하면서 EU의 출현을 일종의 Peace Building System의 형성이라고 평가하고 있다⁸⁾. 그가 지적한 EU의 평화론적 의미는 여러 가지를 내포하는데, 경제통합, 법적 통합을 민주적으로 제도화시키는 것, 공유된 주권론을 통해 영구적인 공생과 협력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 소극적 평화에서 적극적 평화개념으로 전환하는 것,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다양한 수준에서의 다층적 평화추진을 지향하는 것, 평화문화의 확산을 위해 화해와 평화에 대한 집합기억을 확대시키는 것, 그리고 상호성의 원칙을 살리는 대화와 설득문화를 중시하는 것 등을 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대평화는 지나친 개인주의, 이기주의, 경쟁주의를 넘어서 공존과 공생, 배려와 연대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근대성을 추구하는 노력을 포함한다. 이것은 소외와 아노미, 불안에 직면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면적인 평화와 함께 타자와 화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일상생활과 생활영역에서의 평화구현을 지향한다. 동시에 국민국가적 경계에 한정된 평화가 아니라 지역의 평화형성까지를 포용하는 연대와 관용의 문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Reyhler는 평화를 폭력의 상대개념으로 파악하고 물리적 수단에 의한 폭력, 심리적 수단에 의한 폭력, 문화적 수단에 의한 폭력, 구조적 방식에 의한 폭력, 나쁜 통치, 조직적 범죄, 환경적 폭력 등을 해소하는 노력을 평화학의 목표로 간주한 바 있는데 궁극적으로 개인심리의 차원에서도 평화가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⁹⁾. 그렇게 되면 테러방지, 평화를 위한 기술, 종교간 화해, 민족분규의 억지, 비핵화, 군축 등의 요인들이 개인적 차원의 행복추구나 평화로운 삶의 지향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역지라는 가장 중요한 평화의 차원을 강조하면서도 국가와 시장, 개인의 삶과 시민적 유대의 상호연관성이 밀접해지는 21세기에 다차원적인 평화를 구상하는 평화학의 정립을 통해 녹색의 가치도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8) Harry Anastasiou, "The EU as a Peace Building System: Deconstructing Nationalism in an Era of Global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eace Studies*, Vol. 12 No.2, 2007.

9) Luc Reyhler, "Challenges of Peac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Peace Studies*, Vol. 11 No. 2, 2006.